【서 평】

백영서 著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 공생사회를 위한 실천과제 - 』

(창비, 2013)

정남희*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새에게 하나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 헤르만 헤세의『데미안』中

책에 대한 분석에 앞서 저자의 둥지, 저자가 깨뜨리려 하는 알, 그리고 저자의 투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 책이 가지는 의의, 이 책이 탄생하게 된 맥락의 파악이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다.

저자의 둥지는 '창작과비평사(이하 창비)'이다. 2000년에 출간된『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이하 동아시아의 귀환)』와 이 책은 모두 창비에서 출간되었으며, 또한 저자는『창작과비

* 영남대학교 동아시아문화학과 박사과정

평』의 주간으로 있다. 이것은 저자의 저술 성향을 예상하게 하는 부분이다. 창비의 '분단체제론', '복합국가론', '이중과제론' 등의 기존 담론을 계승하는 동시에 이 담론들을 한반도에서 동아시아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지점에 저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둥지 역시 하나의 알이기도 하다. 창비의 담론에 대한 비판, 예를 들어 한반도 특권화, 한반도 중심주의를 동아시아 담론가인 저자는 극복해내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러한 맥락 속에 이 책이 탄생하였다고 생각된다. 창비 내부적으로도 한반도라는 틀을 벗어나기 위한 방식으로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들, 동아시아의 여러 잡지사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물로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 시리즈가 출간되기도 했다. 저자는 이 시리즈의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중국, 대만, 일본의 동아시아 연구자들과 교류해왔다. 국내외 최신 책과 논문을 섭렵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적 대응으로서의 글쓰기를 해가는 저자의 열정은 후학으로서 본받을 만한 모습인 듯 싶다.

저자가 깨뜨리려는 알은 무엇인가? 저자는 책 229~230면에 걸쳐 '과학으로서의 역사학'과 '비평으로서의 역사학'을 대비적으로 배치하여, '비평으로서의 역사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시한다. 그 중심에는 '대중과의 소통, 지식생산의 결과 공유'가 자리한다.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서 비평적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역사학자이다. 역사학계의 주류적 연구 태도는 무엇인가? 역사학자의 주된 연구대상은 과거이며, 연구방법은 사료와 실증에 기초한다. 과학적 방법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역사학이다. 저자는 '비평으로서의 역사학'을 말하며 역사학의 틀 내부에 머무르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역사학이라는 분과 내부에서만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결국 저자는 '사회인문학'이라는 융합적 성격의 학문 개념을

제시한다. 사회인문학은 저자의 표현대로라면 '21세기형 실학'이다. 사회인문학은 고착화되어 있는 개별분과학문의 한계를 인식하고 '융합'과 '공공성'이라는 꼭지로 사회(과학)와 인문학을 통섭해가는 총체성 회복의 투쟁과정이다. '온전한 삶의 총체적 감각 회복'을 위한 학문이 바로 사회인문학이다. 저자는 역사학이라는 알을 깨고, 사회인문학이란 세계로 나아가는 투쟁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것은 저자의 '현장성'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는 학문적 대상 또는 현장과 거리를 두며 관찰자로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애쓰는 사람이다. 하지만 저자는 머리말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저자는 핵심현장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는 학자이다. 저자를 현장운동가라고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동아시아 학자들과의 교류 속에서 동아시아의 모순과 갈등이 응축된 장소를 발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실천적 학자라고 평가하고 싶다. 감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듯이 저자는 발 딛은 그곳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동아시아의 공생적 미래를 바라본다. 저자의 '현장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은 '실천과제로서의 동아시아' 개념이다. 저자는 15년 전에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 개념을 제시했다. '지적 실험'이라는 말이 가지는 현장과의 거리감, 상아탑적인 냄새를 극복하고, 저자는 '실천과제'라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것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육화(肉化)시켜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공생사회를 위한 실천과제'를 부제로 내건 데에는 저자의 고민들이 단지 사고 실험이나 지적 유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구체적 실천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듯싶다. 이것은 독자를 향한 저자의 손짓이다. 저자는 전작에서 "사실 우리는 국민국가의 경계 안팎을 넘나드는 지역의 관점을 도입하는 데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고 말하였다(『동아시아의

귀환』, 164면). 그때에 비하면 동아시아 담론은 많이 풍성해진 것 같지만, “이 지역의 현실을 돌파할 힘을 과연 갖고 있는가” 저자는 묻고 있다(10면). ‘다시 묻다’라는 말은 일차적으로 저자 자신의 되새김질이기도 하지만, 독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책의 맥락에 대한 언급을 넘어서 책의 내부를 살펴보자면, 이 책은 프롤로그·에필로그를 포함하여 총 13편의 발표문과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롤로그와 제1부의 일곱 개의 장은 ‘실천과제로서의 동아시아’론과 ‘동아시아 공생의 방법과 과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2부의 네 개의 장과 에필로그는 한국 역사학자(주변)의 시각에 비친 (대만을 아우르는) 중국에 대한 글이 실려 있다. 저자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책의 머리말(책을 펴내며, 4~11면)에 소개하고 있고, 이 글은 좋은 길잡이가 된다.

과연 이 책은 독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앞서 저자는 독자에게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저자는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비평적 글쓰기를 표방했지만, 애석하게도 주된 독자층은 지식인일 것이다. 결국 지식인으로서의 독자에게 저자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책은 반복적으로 동아시아 담론은 저자 혼자만의 성과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결국 이 책은 동아시아 담론에 많은 지식인들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하나의 몸짓이다. 독자의 참여를 기대하는 가운데, 저자는 지식인들에게 사고의 틀과 장(場)을 제공한다. 그럼 저자의 사고의 틀과 장은 어떠한가? 지면의 제약과 요약의 덧없음을 고려해서, 본 서평에서는 13편의 글을 따로따로 주저리주저리 언급하지 않고 저자의 중요한 개념인 ‘공생’, ‘실천과제로서의 동아시아’, ‘이중적 주변의 시각’, ‘핵심현장’,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론’, ‘복합국가론’을 살피고 이에 대한 딴죽을 걸

고자 한다.

책의 표지에서 저자는 부제로 '공생사회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공생'이란 무엇인가? 프롤로그(26면)에서 저자는 공생의 의미를 하나자키 코헤이(花崎皋平)의 글(주 29)에서 가져온다. "공생은 자기 공동체의 존속만을 목표로 삼아 폐쇄적 동질성을 추구하는 공동성의 원리와 다르고 또한 고독한 개개인의 실존으로 돌아가는 것과도 구별된다. 공생은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의 연결을 모색하는 시도다. ……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공생(즉 더불어 사는 삶)은 공고(共苦, 즉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감당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공생이란 참으로 얻기 쉽지 않은 것이며, 공생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차원에서 여러 논쟁이 있어왔다. 2008년 김종철 선생과 백낙청 선생 사이에 오고간 논변을 살펴보면, 김종철 선생은 공생이 '공빈(共貧)'과 '農的 순환사회'에서 이룩될 수 있다고 본 반면, 백낙청 선생은 '절제'와 '변혁적 중도주의'를 통해 이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생으로 가는 길은 다를 수 있지만 공생으로 가야한다는 지향성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서평자 역시 '공생'이란 말의 도덕적 당위성에는 깊이 공감을 한다. 그러나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시아 문화권의 공유 유산인 유교의 팔조목을 비틀어서 살펴보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범위의 확장을 보여준다. 개인, (대부의) 집안, 국가, 천하는 이익 공유의 단위이다. 동아시아에는 현재 곳곳에서 영토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국가가 하나의 이익단위이기 때문이다.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고통을 공유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서평자의 이런 소박한 딴죽에 대한 저자의 예상답변은 책 속

에 이미 있다. 저자의 국가관은 현실 속 국가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저자의 국가관은 창비 담론과 이어져 있는데, 저자는 국가가 '해방과 억압의 이중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저자는 "단순히 국가무용론을 주창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통적 국민국가의 강점을 살리면서 한층 민주화된 국가 구조의 창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74면)"을 취한다. 저자에게 국가란 갱신해야 할 것이지, 탈주해야 할 것은 아니다. 전작에서 저자는 '지향(志向)으로서의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동아시아의 귀환』, 34면). 이 책에서는 그것이 복합국가론(22, 74~75면)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복합국가론 이외에도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주권의 균열과 재구성(22면), 연성지역주의(soft-regionalism, 114면), 열린 지역주의(78면), 지구지역학(Glocalogy, 182면), 시민사회론(126~134면)과 민주적 책임론(71, 96면), 공치(共治, governance, 71~74면), 비판적 중국학(312면) 등 국가를 갱신할 여러 방안들을 제시한다.

국가를 갱신하기 위한 과제는 이중적인데, 내부와 외부로 나눌 수 있다. 내부적으로 국가를 갱신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된다. 반면 외부적으로 국가를 갱신하기 위해서 '비판적 ○○학'을 요구한다. 저자는 제1부 4장에서는 중국-일본-미국으로 이어지는 세 제국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있고, 에필로그 「중화제국론의 동아시아적 의미: 비판적 중국연구의 모색」을 통해 본격적으로 중국을 살피고 있다. 과거 중국의 역사와 현재 중국의 담론들을 중심으로 조공체제, 문명국가론, 천하관 등을 살피고 있다. 저자는 "'비판적 중국학'을 정립하여 중국과 그 주변의 여러 나라의 주체 간에 서로를 비추는 거울(곧, '공동주관성')의 관계를 성립해내야 함(312면)"을 말한다. 국가의 갱신 없이는 결코 공생사회란 이룩될 수 없다. 그리고 국가의 갱신이란 개인이나 시민그룹의 실천으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은 '실천과제'를 요

구한다.

두 번째 핵심어는 '실천과제로서의 동아시아'이다. '동아시아'란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책 44면에서 저자는 '동아시아'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일차적으로 저자는 동아시아를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을 지리적 경계로 설정할 경우 많은 모순들이 발생한다. 블라디보스톡은 동아시아인가? 네팔은 동아시아인가? 저자는 "동아시아란 지리적으로 고정된 경계나 구조를 가진 실체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앞에 관형격조사 '의'를 놓아 동아시아의 개념을 정립한다. '실천과제로서의 동아시아'는 "지역을 호명하는 주체가 수행하는 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동하는" 것이다.

'실천과제로서의 동아시아' 담론은 타께우찌 요시미(竹內好, 1910~77)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개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온 것이다(62~67면). 타께우찌는 "서양이 만들어낸 보편적 가치를 보다 높이기 위해 서양을 변혁"하는 주체로 "동양"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으로서, 주체형성의 과정으로서는 있지 않겠는가" 라고 조심스럽게 표현한다. 이것을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자신으로서도 힘들다고 타께우찌는 말한다. 저자는 타께우찌에게서 "저항하는 주체의 형성"을 읽어낸다. 저자는 자신의 입장이 타께우찌의 사상과 "주체의 내재적 비판성을 발굴하여 근대를 극복할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며, 근대세계를 역사적 맥락에서 다시 본다는 점, 이중과제론을 수반한다는 점에서는 다르다고 표현한다(67면).

저자의 이러한 개념은 뫼비우스의 띠와 비슷하다. 동아시아는 개념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동적인 것이다. 이를 정

의하기 위해서는 실천과제가 필요한데, '실천과제'는 '공생사회 구현'이다. '공생사회 구현'이라는 실천과제를 통해 동아시아의 개념이 수립된다. 수립된 '실천과제로서의 동아시아' 개념은 다시 '공생사회를 위한 실천과제'를 낳는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처럼 '동아시아'의 정의의 확립은 쉽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저자에게 동아시아란 무엇인가'를 묻기보다 '왜 저자는 동아시아를 호명하는가?'를 묻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 저자는 동아시아를 왜 호명하는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 지식인이 인접 국가 내지 국민들과 공생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동아시아를 호명하는 것이다. 결국 저자의 담론은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론이다. 타께우찌의 서양을 변혁하기 위한 방법과는 조금 다른 공생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론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천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민주적 책임'을 매개로 하는 국가의 갱신과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과 동시에 동아시아의 개념을 확립해나가는 실천(전략적 지성의 결집), 이 두 가지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마도 전자는 시민사회를, 후자는 지식인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혹시 공생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동아시아를 호출하는 저자는 한반도를 특권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1장 주 40에서 보듯, 저자의 동아시아론에 대해 "한반도 중심주의"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것은 오해라는 저자의 해명이 책 51~52면에 있긴 하지만, 한반도 중심주의라는 비판을 벗어나게 해주는 효과적인 장치는 '이중적 주변의 시각'과 '핵심현장' 개념이다.

세 번째 핵심어는 '이중적 주변의 시각'이다. 여기서 '이중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책 123면에서 저자는 '아시아'의 어원을 밝히고 있다. 유럽 중심적 입장에서 아시아는 동쪽에 치우친 주변이다. 우선 이것이 하나의 외부적 주변이다. 이와 함께 동아

시아 내부에서도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다. 이 둘이 '이중적'의 의미이다. 저자의 글을 직접 인용하면, '이중적 주변의 시각'은 "서구 중심의 세계사 전개에서 비주체화의 길을 강요당한 동아시아라는 주변의 눈과 동아시아 내부의 위계질서에서 억눌린 주변의 눈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16~17면)." 여기서 중심과 주변은 지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저자는 "주변이란 어디까지나 시각과 관련된 것"이라고 또한 "어디가 중앙이며 어디가 주변인가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라고 본다(31면). "'이중적 주변의 시각'은 무한한 연쇄관계 또는 무한 억압이양(抑壓移讓)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자 그 극복을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17면)."

저자의 동아시아론이 '한반도 중심주의'라는 비판을 극복하는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중적 주변의 시각'에 있다. 저자의 동아시아 담론은 시선의 이동과 시선의 주체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심과 주변은 유동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복합국가론'은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한반도 중심주의로 비춰질 수 있지만, 오끼나와나 대만의 경우에는 '복합국가론'이 참고자료 내지 연동되는 실재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어 중의 하나는 '연동하는 동아시아(8면)'인데, 한반도의 천안함 사건이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에 영향을 미쳤듯이, 한반도의 복합국가 건설은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한편, 저자는 '한반도 중심주의'라는 비판을 극복하는 더욱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핵심현장' 개념이다.

네 번째 핵심어는 '핵심현장'이다. 저자의 '핵심현장' 개념은 360면에 실려 있는 원문출처에 따라 추정해보면, 대략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1장 주 26의

와까바야시 치요(若林千代)의 '현장'이란 용어가 자극제가 되어 저자의 '핵심현장' 개념이 체계화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현장'은 2013년 오끼나와에서 열린 제5회 '동아시아 비판적 잡지 회의'의 주제어로 채택되었고, 백낙청 선생은 첫 쎄션의 발표를 통해 '핵심현장' 개념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다. '핵심현장'이란 무엇이며, 대표적인 '핵심현장'은 어디인가? 핵심현장은 "중화제국-일본제국-미제국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의 이동에 의해 위계 지어진 동아시아 질서의 역사적 모순이 응축되었고, 식민과 냉전이 포개진 영향 아래 공간적으로 크게 분열되어 갈등이 응축된 장소이다(17면)." 저자는 이러한 핵심현장을 세 군데 지목한다. 책 167~179면에서 저자는 국가 (간)의 경계에 선 세 도시를 지목한다. 진먼(대만), 오끼나와(일본) 및 개성(한반도)가 바로 세 곳이다. 저자는 이 세 곳의 과거와 현재를 살피고, 7장의 결론부에서 지구지역학(Glocalogy)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국가가 아닌 경계의 도시를 '핵심현장'으로 설정한 데 대한 이유가 결론부에서 드러난다. 경계선에서 동아시아의 연계와 연동의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핵심현장' 담론을 통해서 저자는 '한반도 중심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핵심현장 중심주의'로 나아간다. 기존의 '복합국가론'이 의도한 범위를 동아시아로 확장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물론 책 51~52면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의 '복합국가론' 역시 '한반도 중심주의'라고 비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복합국가론'을 담고 있는 저자의 동아시아론이 '한반도'에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책은 그러한 방점을 오끼나와와 진먼에도 찍음으로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 핵심어는 '근대의 이중과제론'이다. '이중과제론'은 1999년 백낙청 선생에 의해 제기된 이래 계속 발전되어오고 있다(7장

주 14 참고). ‘근대의 이중과제’론이란 무엇인가? “탈근대론의 과잉과 신판 근대주의의 유행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현실적인 근대극복의 전망을 찾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 ‘근대의 이중과제’론이다(161면).” 이중과제란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을 이중적인 단일과제로 동시에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다소 추상적이고 논리적 모순으로 보일 수 있는 이 개념을 저자는 오끼나와를 이야기하면서 적용하고 있다. 오끼나와는 ‘류우뀨우 처분’(1879년)에 의해 국내식민지(internal colony)가 되었다. 1945~72년까지는 미군에 의해 통치되었고, 1972년에 비로소 일본으로 복귀되었다. 오끼나와(류우뀨우)는 국민국가를 이룩하지도(근대에 적응하지도) 못했고, 근대를 극복하지도 못했다. 저자는 오끼나와가 주권의 중층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중과제론’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평자는 ‘이중과제론’의 의미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이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책 174면에 나타난 왕 후이(汪暉)의 글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왕 후이(汪暉)는 “오끼나와의 애매한 독립성과 독특성”은 “‘민족독립’을 단순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주적인 새로운 정치형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일종의 자주적인 새로운 정치형식’이란 ‘근대적응’보다 ‘근대극복’에 무게가 실려 있다. 또한 왕 후이의 ‘반현대성의 현대성’론도 중국의 근대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근대극복을 지향하고 있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의 ‘세계공화국’론도 일종의 근대극복론이다. 분명한 것은 ‘이중과제론’ 자체가 “근대를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인식하여 그것을 넘어서는 대안을 찾는 일”이라는 점이다(161면). 이점에 있어서는 ‘이중과제론’도 그 고민을 같이 하

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중과제론'이 제시될 1999년과 2014년 현재 사이에는 15년의 세월이 있다. 그러나 '이중과제론'에 세월의 무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201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도 적응해야 할 근대가 남아 있는가? 물론 '복합국가론'과 연동되어 있는 개념으로서의 '이중과제론'은 한반도에 복합국가를 이룩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여전한 숙제로 남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서평자 자신의 게으름과 무지에서 비롯된 딴죽일 수 있어 조심스럽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근대는 '국민국가의 수립과 완성'이라는 의미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라는 의미가 더 강하며, 그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적응해야 할 것이라기보다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그래서 근대적응이라는 말 자체가 상식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오해와 불편함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탈근대 담론의 중요한 성취 중의 하나가 자본주의 세계체제 즉, 획일화된 근대성의 탈피이고, 인간의 삶의 방식에는 다양한 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닐까? 서평자가 보기에 아시아 곳곳에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동아시아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인도와 중국 사이의 영토분쟁지역 악사이 친(Aksai Chin)의 라다크를 예로 들면, 이들이 인도와 중국과는 다른 별도의 국민국가를 수립(근대에 적응)하고 주변국과 연대(근대를 극복)해야 한다고 서평자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자는 공생을 획득하는 방법으로서 국가를 중요한 (과정적) 장치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왜 조금 더 급진적이지 못한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저자가 22~23면에서 소개한 데리다의 '인민주권' 개념을 참고하면, 국가 없이도 주권은 존재할 수 있으며, 주권 개념이 없어도 라다크인들은 충분히 잘 살아왔다. '지구지역학'을 조금만 더 밀고 나가면 동아시아를 설명하는 더 좋은 틀이 만들어지

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복합국가론'이 무가치하다거나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특화된 방식일 수 있고,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분명 저자의 생각처럼 한반도의 복합국가론은 오키나와와 대만 더 나아가서 아시아와 세계로 확장가능성이 있는 유의미한 담론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을 생각해보면, '복합국가론'은 그 확장범위에 있어서 제약이 존재한다. 내몽골의 목동에게, 차간호(查干湖)의 어부에게, 메콩강의 낚시꾼에게, 도이창의 아낙네에게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 '복합국가론'은 그리 필요한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사실 그들에게는 동아시아 담론조차 필요하지가 않다.

추가적으로 아쉬운 점은 계급적 주변과 지역적 주변이 저자의 '이중적 주변의 시각' 추구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중산층과 새로운 정체성의 가능성은 언급하고 있지만, 중국의 농민공 등의 하층계급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이다. 공생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시민',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다보니, 노동자, 농민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저자의 '시민' 개념에 '노동자'나 '농민'이 배제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만, 동남아시아의 고단한 현실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한중일 연구자 교류에만 치우친 연구 풍토나 저자의 학술적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기는 하다. 분명한 것은 이 책이 전작『동아시아의 귀환』에서 다루어진 대상들(중국, 홍콩,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에 비할 때, 대만, 오키나와로의 시선확장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동아시아'

라는 개념이 가지는 규모를 생각해보면, 그 범주와 시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저자 개인에게만 요구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동아시아 담론 현장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 전략적 지성들의 과업이라고 생각된다.

이 서평을 퇴고하는 단계에서 이 책에 대한 두 편의 서평이 발표되었다. 유용태의 「사회인문학적 동아시아론의 진전」(『중국근현대사연구』 제61집, 2014.3, 185~193면)과 연광석의 「역사를 감당한다는 것」(『황해문화』 82호, 2014.3, 401~411면)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편의 글을 읽으면서 서평을 제출하여 공개하는 것이 참으로 망설여지고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두 분의 글을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새롭게 글을 쓴다면 더 좋겠다 싶으면서도 세월은 모질게도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탓에 한 문단 정도 이 두 서평을 소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유용태의 「사회인문학적 동아시아론의 진전」은 '서평의 정석'이라고 할 정도로 맥락과 내용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평자는 저자의 동아시아론을 학술적 과제(책의 1부)와 사회적 과제(2부)라는 두 틀로 나누어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저자의 사상가적 면모를 높게 평가하며, "토종의 사상자원을 다듬어 자신의 동아시아론을 세우고 이를 이웃나라 지식인 사회에 발신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학인에게 요청되는 자세"라고 말한다(189면). 이것은 연광석의 「역사를 감당한다는 것」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연광석은 대만 유학경험과 사회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복합국가론' 등이 대만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되물으며, "우리의 동아시아론이 기존의 것을 외부로 확장하여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내부에 억압된 것을 사상적 차원으로 길어올려 자기혁신하지 못하는 언어와 담론의 부재, 나아가 주체성의 부재를 극복하는 상호참조의 장으로서 우선적인 의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언"하고 있다

(411면). 이 둘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지만 상호연동되는 것이 아닐까 서평자는 생각한다. 저자가 '비판적 중국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빌려오면, 서로를 비추는 거울('공동주관성')이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토종의 사상자원을 이웃나라에 소개하는 것은 거울 앞에 서는 일이고, 거울 앞에 설 때야 비로소 매무새를 가다듬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자기 확장과 자기 혁신은 동시적이고 복합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 더 언급하자면, 역사학자인 유용태는 서평 결론부에서 '동아시아담론'의 양에 비해 '동아시아사'의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역사학자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연구자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동아시아를 역사적으로 접근할 경우 동아시아를 총제적으로 묶어낼 연관성(틀)이 존재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경제·정치적으로는 ASEAN+3 등으로 동남아를 포괄해내는 그림이 가능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한반도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자산이 무엇인지는 고민이 된다. 유교, 한자, 조공체제 등은 동북아에 치우친 경향이 있고, 불교의 전파를 생각하면 동남아 일부지역을 포괄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 등의 이슬람은 독특하다. 이러한 역사문화적 접근방법은 '동아시아' 담론이 어떻게 '동남아시아'를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동아시아'의 개념은 다만, 실천과제(과정 내지 방법)로서만 존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저자의 정의로 다시 회귀하게 된다.

이 책의 서평을 쓰면서 감히 논문별로 요약을 하지 못한 것은 저자의 방대한 지식 때문이다. 국내외 최신 이론들과 방대한 역사적 자료들을 요약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불가능했다. 『동아시아의 귀환』과 이 책은 동아시아 연구자라면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하는

산과 같다. 또한 동아시아에 관심 있는 대중이나 지식인이라면 한 번쯤 구입해서 읽고 고민해봄 직한 책이다. 이 책이 상당한 지적 자극과 연구에 대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6장에서 표현한 '실감으로서의 동아시아'란 과연 어떤 것일까? 감상에 잠겨 본다.

"그리고 나는 동아시아인으로 살아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오키나와의 별에는 바람이 스치운다."